

“미인가 대안학교에 대한 법제화 및 재정 지원 정당성 검토”에 대한 논평

임태규 / 두레자연고등학교. Ph.D(기독교교육)

평자는 이종철 연구원의 논문을 읽고 우리나라에서 대안학교 운동이 시작되던 때로부터 지금까지 미인가 대안학교에 대한 정부의 정책변화에 대해서 보다 면밀하게 정리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하게 생각한다. 본 논문은 대안학교의 간략한 역사와 현황 그리고 특징은 대안학교에 대해 어느 정도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대체로 잘 알고 있는 내용이어서 크게 새로울 것이 없다고 하겠지만, 법제화와 재정 지원에 대한 부분은 대안교육 전문가가 아니면 쉽게 접할 수 없는 내용이기도 하고 또 최근 대안교육 운동의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시의 적절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대안교육 관계자들은 물론 연구자들에게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하겠다. 먼저 이런 점에서 이종철 연구원의 논문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낸다.

우리나라의 대안학교 역사가 비록 20년이 채 안될 정도로 일천하기는 하지만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양적 성장은 가히 폭발적이라 할 수 있다. 비공식적인 자료에 의하면 현존하고 있는 기독교대안학교의 숫자만 해도 300개를 넘어서고 있다고 하니 전체 대안학교의 수는 거의 500여개에 육박하고 있다고 봐도 될 것 같다. 그러나 이와 같은 양적 성장에 비례해서 수많은 문제들이 양산될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여기에 대한 정부의 대안학교에 대한 정책은 대안교육 관계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에 역부족이었다.

평자가 생각하기에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대안학교(기독교대안학교) 내지는 대안교육(기독교대안교육)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정부와 대안교육 관계자들의 인식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본다. 이종철 연구원도 자신의 논문 주제에 충실하게 논의하면서 전반적으로 대안학교의 정체성 부분을 고민한 흔적이 많이 보였다. 우리나라 대안학교의 현황과 특징을 정리함에 있어서도 대안교육에 대한 정체성이 전제되어 있을 수밖에 없고 또 대안학교의 법제화 문제와 재정 지원부분도 근본적으로 대안교육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양한 견해에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평자는 이종철 연구원의 논문을 평함에 있어서 첫 번째로 대안교육의 정체성 문제를 언급하고자 한다. 어느 나라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교육일반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대안교육은 발생했다. 달리 말하면 교육의 본질과 가치가 이러저러한데 현재 나타나고 있는 교육의 현상이 이러저러하게 때문에 새로운 교육 즉 대안교육이 지금 이 시대에 요청된다고 하는 관점에서 대안교육을 이해해야 한다는 말이다. 물론 교육의 본질과 가치는 세계관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 이런 점에서 일반대안학교와 기독교대안학교는 출발부터가 다르다고 하겠다. 그런데 대안교육이 교육일반의 현상과 수월성 경쟁을 한다거나 아니면 교육일반의 왜곡된 교육문화와 가치들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겠다. 예를 들면, 대안학교에서 입시경쟁 교육을 한다든지 수월성 교육을 한다든지 글로벌 인재양성이라는 이름으로 영어몰입식 교육을 한다든지 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라 하겠다. 또한 고유이념과 교육의 자율권을 내세워 특정한 종교적 목적을 추구하는 것을 공교육의 대안이라고 보고 배타적이고 귀족적 기독교교육을 실시하는 경우도 왜곡된 대안교육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겠다.

두 번째로 이종철 연구원이 정치하게 논의한 법제화와 재정지원 부분에 대한 평자의 생각을 정리하고자 한다. 법제화 논의에 대한 논란은 이종철 연구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대안교육 관계자들과 정부와의 대안교육에 대한 인식 차이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앞서 평자가 지적한 대안교육의 정체성 문제와 맞물려 있다. 평자는 이종철 연구원이 설명하고 있는 1차 2차 3차에 걸친 법제화 논의과정을 통하여 볼 때 법제화 논의에서 가장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부분이 정부가 대안교육진영에 요구하고 있는 교육의 공공성 내지는 책무성과 대안교육 진영이 강조하고 있는 교육의 자율권 사이의 간격이라고 생각한다.

사람들은 이 두 입장을 교육의 책무성을 강조하게 되면 자율성이 약화되고 반대로 교육의 자율성을 강조하면 책무성이 약화된다는 식의 진자 운동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평자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이 두 입장은 오늘날 이 시대교육이 마땅히 지향해야 할 필수적인 교육적 조건이 되어야 한다. 대안교육이 일찍부터 자리매김을 한 외국의 경우만 보더라도 이 두 입장은 공존할 수 있었다. 그런데 왜 우리나라에서만 이 문제가 그토록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지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역시 대안교육의 정체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최근 몇 년간 대안학교가 폭발적으로 등장한 것에 비례해서 소위 천민 대안학교들의 등장한 것과 교육을 국가주도 아래 두자는 정부의 강한 입장이 문제가 된 것이다. 안타까운 것은 3차 법제화 과정 당시 거의 정부 측과 기독교대안학교 진영이 충분한 논의 끝에 미인가 대안학교 등록제 안이 채택될 지경에 이르렀을 때 일반 대안학교 진영에서 반대하는 바람에 미인가대안학교 등록제 방안이 무산되었다는 사실이다.

법제화 논의에 맞물려 미인가 대안학교 재정 지원방안에 대한 논의에 대해서는 이종철 연구원이 미인가 대안학교에 대한 재정지원의 당위성과 법적인 타당성, 그리고 외국의 경우를 들어서 아주 설득력 있게 논의하였다. 그리고 지원 방안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예를 들어 주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견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대안학교에 대한 재정적 지원의 정당성이 아주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 정부가 부정적이고 미온적 태도를 취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대안학교 진영에서 그 이유에 대해 교육적 법적 정당성이 분명하다면, 전체 대안교육진영이 일심하여 법적인 투쟁과 아울러 대안교육에 대한 정당성을 강력하게 주장한다는 차원에서 교육세 환급 운동을 전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겠다. 외국의 경우도 법적인 투쟁을 오랫동안 전개한 결과 대안학교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확보했다고 한다.

하지만 대안교육 진영에서는 대안교육의 본질과 가치가 변질되거나 왜곡되지 않도록 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하겠고 대사회적인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수준 이상으로 대안교육을 실시하여 대안교육이 공교육과 대척점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소통하며 상생하는 교육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더구나 대안학교가 정부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을 경우 대안교육이 자율성을 잃게 되어 공교육화되어 버릴 수도 있다는 이상한 논리에 집착하지 않아야 한다. 이미 공교육 안에서도 대안교육의 트레이드마크와 같은 프로그램들이 혁신학교와 같은 형태에서 이미 이루어지고 있고 또 대안교육정신을 뛰어 넘는 수준의 교육도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